



# 에너지절약과 技術開發을 통한 外債절감

丁 奎 禎

(동력자원부 행정관리담당관)

## 1. 최근의 국내 경제동향

지난 20년간의 開發年代를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가 겪은 커다란 시련이라 할 수 있는 「80년 頁의 성장(-5.2)」은 제5 공화국 출범 이후 경제정책의 基調를 물가안정에 두고 안정적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거 高度成長期에 누적된 구조적 문제-만성적 인플레이, 국제수지적자 심화, 경제력 집중, 경제효율 저하, 기업의 정부의존 과다-등의 해결에 주력한 결과 82-84년 중 우리 경제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획기적인 물가안정을 이룩하고 이러한 안정의 바탕 위에서 7.5% 수준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상반기중 우리 경제가 3.2%의 低成長에 그치고, 하반기 들어서도 생산·수출·투자·소비가 상반기의 低成長을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지 않고 있어 금년도 경제성장율은 당초 정부의 목표치인 7-8%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한국개발원(KDI)에서도 올해 경제성장율은 5-6%에 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둔화 추세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84년에는 80년 이후 가장 높은 4%의 성장율을 시현하였던 세계 경제도 84년 하반기부터 美國 경제가 급격히 냉각됨에 따라 경제침체의 정도가 당초 예상했던 수준보다 나쁘게 진전되고 있다.

세계의 경제 예측기관들은 금년 하반기부터 세계

경제 성장세가 다소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OECD 24개 선진국의 평균성장율은 금년에는 3%대, 내년에는 2.5% 내외로 떨어져 뚜렷한 하강 국면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개발도상국의 선두그룹을 이루고 있는 아시아의 신흥공업국(NICS)의 금년도 성장을 보더라도 싱가포르가 -4.5%, 台灣과 홍콩은 작년의 절반밖에 안되는 5% 내외의 수준으로 성장둔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2. 經濟 운용의 당면과제

이와 같이 선진국 경제와 東南아시아의 신흥공업국 경제가 경기하강 현상을 나타내고 선진국에 의한 보호무역주의와 무역마찰,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조 조정지연, 美國의 高金利와 달러화 강세 등으로 세계 경제의 경기전망이 불투명해지게 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제한된 범위내에서 수출증대 및 투자촉진에 관한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성장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경기침체가 경기 순환적 요인과 경제구조적 마찰의 복합적 요인에서 파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정책 대응은 그 동안의 경제운용 2대 기조인 물가안정과 국제수지개선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므로 정책 수단의 동원과 집행에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경제는 앞으로도 물가안정과 국제수지개선의 경제정책 運用基調를 그대로 견지해 나가면서 고용안정과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적정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고, 이 가운데서도 국제수지개선에 중점을 둔 「外債절감」은 88년까지 수입자유화를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할 것을 목표로 대외개방과 국제화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경제가 성장둔화·보호무역주의 장벽·고금리하의 국제경제 환경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해 가면서 安定基調와 자력성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한 당면 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의 운용방향과 관련한 外債문제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대통령 각하께서도 지난 9월 제 128회 정기국회에서 밝힌 「86년 施政演說」 가운데서 「새해의 경제운용은 국제수지개선에 중점을 두어 外債를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각 부처의 시책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外債절감문제와 연계시켜 검토하는 등 각별히 힘쓰겠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경제주체가 外債절감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각계지도층 인사들이 소비절약 운동에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하신 바 있다.

### 3. 외채의 功過

1982년 8월에 멕시코가 「채무지불불능」을 선언하면서 관심의 초점이 된 개발도상국의 外債문제는 세계경제의 성장둔화,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국제 高金利의 지속과 함께 80년대 국제경제가 안고 있는 4대 현안과제의 하나로서, 지난 10월초 서울에서 열린 제40차 IBRD, IMF 연차총회에서도 주요의제로 채택·논의된 바 있는데, 外債문제는 채무국 입장에서는 대외결제자산의 확보와 성장재원의 부족등 경제운용면에서 어려움을 안겨 주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민간금융기관의 도산위험과 국제금융기구 운영의 제약등 국제금융 질서를 혼란에 빠뜨릴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1984년말 현재로 개발도상국의 外債잔액은 8,277억 달러로서 이 규모는 1984년 개도국의 GNP에 대한 비중이 36.3%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었으며, 1981년 이후 원리금 상환액만도 1,00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되어 외채문제는 개도국

의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한편 우리 경제는 1962-1979년에 걸쳐 정부주도에 의한 대외지향적 공업화전략을 추진한 결과 연평균 9.2%라는 높은 성장율을 기록하게 되었으나, 성장을 위한 수출과 外資主導에 의한 개발정책의 메커니즘은 외자도입을 가속화하고 대외의존도를 심화시키면서 外延的 확대의 과정을 밟아왔는데, 개발초기 투자재원의 外資의존도가 50%를 상회하였다는 사실은 수출을 성장원동력으로 하는 고도성장정책이 外資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우리나라의 外債 잔액이 450억 달러(대외자산 제외시 340억 달러)에 이르러 절대액 기준으로 세계 4위를 점하게 되고 원리금 상환 부담율이 높아지면서 외채문제에 대한 논란이 활발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자도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正의 효과로서는 성장 및 소득증대, 국제수지개선, 기술도입, 고용증대를 들고 있고, 負의 영향으로서는 국내저축감소, 원리금상환부담,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가 개발체제하에서 무역중심의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外債잔액, 상환부담율과 같은 단기 지표상로나 성장 잠재력, 국제수지개선능력, 국내 저축증대 가능성등 장기 지표를 비교하더라도 멕시코·브라질 등 中南美 채무국에 비해서는 유리한 입장에 있기는 하나, 元利金 상환액이 늘어남으로써 경제운용에 압박을 주고 성장의 이득을 누출시킨다는 점에서 外債의 功過를 객관적이고 嚴正히 평가하여 正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외채 운용에 힘써야 할 것이다.

### 4. 外債문제의 해결방안

정부는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로서 「국제수지 균형기조의 정착과 純외채의 감소」를 설정하고 1986년에는 경상수지균형을 실현하며 1988년 부터는 純外債 규모도 점차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물론 국제수지개선은 안정적인 경제운용을 기반으로 모든 경제부문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저축을 증대하여 경제의 자립도를 제고함으로써 달

성될 수 있을 것이나, 수출 주도적 개발정책을 견지해 가야 할 우리 경제의 성장전략에 비추어 수출이 늘면 그에 따라 수입도 늘게 되는 무역정책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대외의존도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외화가득율을 높이고 수입대체를 촉진함으로써 무역수지 흑자를 실현하고 外債를 감소할 수 있을 것이며, 외채절감의 기본전략이 되는 수출산업의 경쟁력은 바로 「에너지절약」과 「기술개발」을 통하여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 가. 에너지節約을 통한 외채절감

에너지는 자본·노동·기술과 함께 경제활동의 유지와 성장을 위한 필요불가결의 투입요소이다.

우리 경제가 지난 20여년간 高度成長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저임금·유휴노동력, 외국자본과 기술도입, 풍부한 해외시장 등의 개발조건 충족과 함께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의 안정공급이 기여한 바가 크며,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의 경제성장률과 에너지소비증가율이 正의 상관관계를 유지하면서 변화해 왔다는 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경제의 양적인 확대와 함께 산업구조가 공업중심으로 발전하고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에너지의 절대 소요량이 증가하고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국민경제의 에너지 민감도가 높아져 에너지는 성장·물가·국제수지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에너지정책을 적정성장, 물가안정, 국제수지개선등 국민경제 운용기조와 궤를 같이하여 운용해 나가고 있으며, 국민경제가 에너지저소비 구조하에서 안정적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에너지소비절약 및 이용효율화에 에너지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절약시책은 1979년 제 2차 석유파동 이후 국제석유시장이 공급핍박과 가격안등의 구조적 불안정을 노정하게 됨에 따라 국민 경제에 대한 에너지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80년 이래 범정부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11월을 「에너지절약의 달」로 설정하고 범국민적 절약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에너지절약의 생활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금년들어 성장이 둔화되고 수출과 투자가 줄어드는 등 국내의적으로 경제환경이 어려운 때에 에너지절약의 필요성은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각하께서는 지난 11월 6일 에너지절약대책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에너지절약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개인의 소득을 늘리며 국가경제를 건실하게 하는 첩경」이라고 말씀하시고 「정부는 에너지절약을 숭선수범하고 기업과 家計가 적극 참여토록 유인시책 개발과 홍보를 꾸준히 추진」토록 지시하고 「특히 기업들은 에너지절약을 위해 장기적 안목에서 과감히 투자를 하고 소비자들도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하도록 당부하신 바 있다.

80년대 들어 국제석유시장이 공급과잉과 가격하락 현상을 나타내면서 일부에서는 마치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고 에너지절약도 중요도가 낮아진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으나, 경제성장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국내부존자원의 절대 빈곤으로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에너지절약은 날로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우리 나라의 에너지 수입액이 1984년도 기준으로 GNP의 8.2% 해당하는 66억 달러(이중 원유수입액만 52억달러)에 이르고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약 90%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2001년의 에너지 수입액은 221억달러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절약이야말로 경제의 사활이 직결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에너지절약은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外債를 줄이는 첩경이며, 기업의 원가절감을 통하여 해외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최적 수단으로서 연간 에너지 사용액의 10% 절약시 연간 7억달러의 수입 대체 효과가 발생하며 이 규모는 금년도 경상수지 적자 목표치를 해소할 수 있는 금액에 해당된다.

에너지 수요는 인구증가와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증가될 수 밖에 없고 1인당 에너지소비량이 선진국보다 낮기 때문에 소득 상승에 비례하여 에너지 수요 욕구가 커질 것이므로 에너지 부담을 줄이는 길은 절약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더우기 우리나라 총수입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수입원유의 88%가 非家庭用(이중 56%가 산업부문)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산업부문의 에너지原單位가 日本·台灣 등보다 월등히 높아 부가가

치율이 낮기 때문에 산업체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절약 기법의 개발은 긴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정부에서는 산업부문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고 목표 原單位 설정관리, 선진기술 도입, 에너지관리진단 및 기술도입, 窯爐의 에너지 집중관리 등을 통하여 에너지절약형 제품생산을 위한 생산공정의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에너지저 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등 조직적, 원천적, 계획적인 절약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345개 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에너지절약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 나. 기술개발을 통한 외채절감

정부에서는 지난 11월 13일 대통령각하 주제로 기술진흥 심의회를 열고 「기술개발을 통한 외채절감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有關부처가 합동으로 작성·보고한 대책방안의 주요내용은 주요 공산품의 국산화와 에너지절약 기술개발 등 조직적 기술개발 활동을 통하여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가 되고 있는 외채절감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작년도 총수입액 306달러 중에서 수출용 수입이 전체의 41.1%인 126억 달러에 이르고 內需用 기계류 등의 수입액이 19.0%인 59억달러에 이른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수출구조가 불가피하게 수입을 유발하는 취약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외채부담을 줄일 수 있는 원천적인 방법은 기계·부품의 수입을 줄여나가는 길이며, 이를 위하여는 기술개발을 통한 高品質의 부품개발과 기계류 생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여년간 우리경제의 성장은 주로 노동, 자본등 요소투입의 증가와 규모의 경제에 의한 것이었으며 기술의 성장기여율은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급격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수출증대에 필요한 설비를 확대 도입하고 이에 體화된 기술의 습득에만 치우친 나머지 우리의 기술수준은 대외의 환경변화에 기동성 있게 대처해야 할 개방경제 체제하에서 자주적인 성장기반 형성에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술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그동안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기계와 부품의 國產代替 및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학 기술투자의 확대와 기술개발 가속화의 여건 조성등 기술개발 촉진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치열한 세계 기술경쟁과 기술 보호주의 장벽을 극복하고 선진국 경제로의 進入과 경제의 체질개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정책은 범정부적 차원의 중장기 정책과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대통령각하께서도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세계경제는 기술전쟁을 방불할 것」이라고 말하고 「첨단기술을 많이 보유한 나라는 세계 경제환경이 아무리 악화되더라도 생존·발전할 것이나 그렇지 못한 나라는 낙후되어 비참해질 것이므로 우리는 기술 진흥과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신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외 수입의존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요수입 국산품중 국산화 유망품목을 선정하고 이를 국산화 함으로써 앞으로 4년동안 총 20억 달러의 외화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에너지절약 기술부문에서도 85-87기간 중에 총 30억원을 투자하여 6개부문 26개 과제를 특정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기술개발의 효과는 당장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반면에 많은 자금과 시간을 소요한다는 점에서 기술외적인 장애요인의 제거와 에로 타개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부적 차원에서 개발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5. 결 론

外資는 우리경제의 성장발전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무역수지 적자를 보전하는등 많은 기여를 한것이 사실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外資의 성장기여율이 낮아지고 성장의 果實을 침식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두드러지게 됨에 따라 경제개발정책운용도 外資주도의 성장에서 內資에 의한 안정성장을 추구하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경제는 內資동원을 극대화하고 外資소요를 최소화함으로써 外債를 줄이고 자력성장의 기반을 다져야 할

□ 寄稿 □

것이다.

外債은 자립경제를 이루겠다는 신념을 토대로 家計·기업·정부가 모든 지혜를 합쳐서 실천적 노력을 기울일 때에 줄어들게 될 것이며, 외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지금이 바로 외채문제를 해결할 때이다.

외채감축은 기본적으로 국제수지 적자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국제수지 적자폭을 줄이는 지름길은 에너지절약과 기술개발에 있다.

우리는 국제수지개선과 외채감소가 우리경제의 당면과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선도적 위치에서 솔선수범의 마음으로 에너지절약과 기술개발에 진력하여야 할 것이다.

에너지절약은 가정이나 기업 또는 모든 조직에 경제적 이익을 귀속시켜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절약의 이익은 국민경제를 건실하게 성장시켜주게 되므로 절약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절약방법을 과학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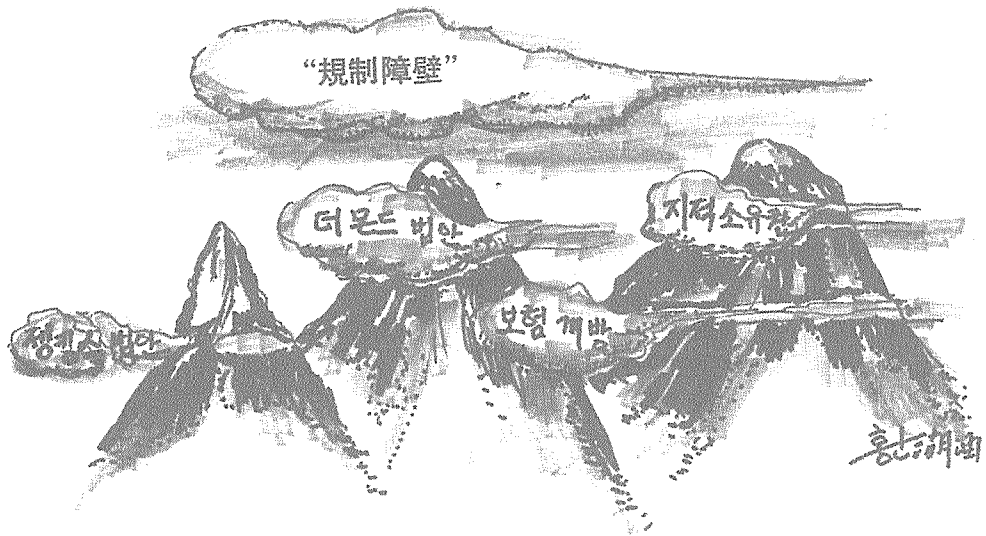
에너지절약은 정부부처, 市道 등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이 기관의 업무내용에 적합한 자체계획을 수립·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관업무중 에너지절약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는 기관의 자체절약 계획을 철저히 준거함으로써 절약시책을 成果爲主로 추진하고 기존계획도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가정에서는 단순절약 방법에서 원천적 절약방법을 강구하고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하는 등 절약 노력을 심화 확산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기술개발에 있어서는 우리경제가 遊休資源에 의존하던 성장단계를 벗어나 경제의 질적개선과 더불어 기술의 성장기여도가 높아지고 있어 기술진보는 우리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며, 기술전쟁의 냉혹한 세계에서 선진기술을 따라잡고 후발개도국의 추적을 벗어나기 위하여 기술혁신이 선진국 進入을 위한 유일한 방법임을 인식하고 모든 힘을 기술개발에 투입하는 적극적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다.

앞으로 기술의 일반화, 정보의 보편화시대에 대비하여 기술에 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여 기술이용을 생활화하는 한편 모든 정책의 입안과 집행이 기술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계의 기술개발을 지원·협조하고 정부부처간 기술관련업무의 유기적 추진에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

□ 漫評 □



萬重雲山이로구나!